

서호인의 '소설처럼'



치유의 소설 김금희, '복자에게'

제주도 곁의 섬에 간 적이 있다. 섬에 들어가는 배에서는 섬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유명 가수의 노래가 반복 재생되었다. 제주도와는 또 다른 곁의 풍광에 출장이라는 것도 있고 바람 냄새를 맡았다. 섬이 차가 다닐 만큼은 크지 않은데, 걸어 다닐 만큼 작지도 않아 우리는 자전거를 빌렸다. 그다지 보관이 잘 되었거나 신형이라고 할 수 없는 자전거를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삐걱삐걱 몰았다.

섬에 왔다고 누군가에게 인사를 해야 할 것만 같았다. 누구에게 해야 할지 몰라서 관두고 말았다. 날은 맑고 파도는 섬의 곁에 와 부딪히고 부서지고 다시 일었다. 당신은 그저 왔다 가면 그만이라는 뜻이다. 김금희의 장편소설 '복자에게'를 읽으며 짧은 여행의 반가운 기시감을 페이지마다 만날 수 있었다. 작가 특유의 담백하면서도 윤택 있는 문장으로 표현된 '고고리섬'과 제주도는 한 번쯤 그곳에 가달고 싶다는 여행자의 심정을 건드리기에 충분

했다. 내가 여행지라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저 그곳에 갔다 오면 그만일 데다. '복자에게'는 제주도에서 나온 자전거가 나, 생애 가장 중요하고 미묘한 시기를 제주도에서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다. 과장되지 않되 생생한 제주 사투리가 등장하는 물론, 4:3에서부터 해녀 조합, 지역 의료원 사태까지 그곳의 삶과 역사가 소설의 크고 작은 모티브가 된다. 그러한 절구의 모티브는 주인공 이영초롱과 복자가 이어지듯, 공간적 특수성에서 역사적 보편성으로 스미듯 나아가는다. 개인적 감정에서 공동체가 공유하는 감각으로 가이로 변진한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판사가 된 이영초롱은 중학생 시절, 갑작스레 기운 가절 형편으로 인해 제주도 고고리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고모와 지내게 된다. 순탄치 못한 판사 생활 끝에 제주에서 근무를 하게 된 그는 고고리섬에서 살던 시절 가장 친

하게 지냈던 친구 '복자'와 자신을 짝사랑했던 친구 '고오세'와 재회하게 된다.

'고복자'는 지역 의료원과 합계은 법정 다툼 중이고, 지역 유지 혹은 권력자와의 싸움이나 다름없는 이 송사에 의료원의 퇴직 간호사이자 개인에 불과한 복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영초롱은 친구의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사건을 살펴볼수록 영초롱의 논리와 마음은 한층으로 기운다. 그 기운이 재판관으로서 영초롱에게 위기가 되고, 그 기운의 과정에서 그가 몰랐던 주변인의 비밀과 과거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낸다.

타의에 의해 제주에 반복해 떠밀려와야 했던 개인의 감정, 그것을 오히려 받아준 섬의 감각. 이들의 만남과 헤어짐이 '복자에게'가 말하고자 하는 바인 듯하다. 복자의 고모는 민주화운동의 상흔이 남아 있고, 복자에게는 섬사람들의 뒷말거리가 된 채 섬을 떠나야 했던 어머니가 있다. 제주도 곳곳에 4:3의 아픔이 물리적인 실제

로 남아 있듯이, 고달픈 현대사의 상처가 지금까지 이어지듯이, 여기에 발붙여 버티고 사는 우리에게도 각자의 고통과 슬픔이 모두 다른 모양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판사와 같은 사회 지도층 인사에서부터 섬마을의 어민에 이르기까지 다 마찬가지다. 그런 마음이 마음에게로 편지를 보낸다. 마음을 발신자로 하여 역시 다른 마음을 수신자로 한 편지가 섬마을의 우체통에서 시청역 4번 출구 우체통까지 전해진다. '복자에게'는 그럼으로써 치유의 가능성이 담긴 하나의 편지가 된다.

어떤 소설은 약이 된다. 치유의 자장가가 된다. 소설 속 노래의 마지막 구절처럼, '행이 자랑 자랑 자랑 / 느네 얘기 재와주마 / 위이 자랑 위이 자랑 / 굽게 굽게 카와줍서' 영초롱과 복자는 모두 잘 살 것이다. 과거에 발목 잡힌 채로, 그 발목을 쓰다듬으며, 그 과정에 제주의 섬과 바다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고고리섬의 돌맹이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의료칼럼

허리에 쇠를 박으면 못 걷는다고?



김종선 첨단우리병원 원장

최근에 새로 이사를 갔다. 우리 집에서는 나한테 벽에 나사를 못 박게 한다. 평생 공부만 한 사람이 언제 못을 박겠냐며, 어른들이나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대신 박아 준다. 사실 난 환자 허리에 천 개 이상의 나사못을 박아 봤는데도 말이다. 그런데도 어른신들의 마음 씀씀이에 감사할 뿐이다.

의학 역사상 허리병 치료에 쇠를 박기 시작한 것이 1970년도부터라고 하니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수많은 논문과 연구 결과가 발표돼 있어 새삼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우스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허리 수술을 하면 허리를 못 쓰게 된다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고, 허리에 쇠를 박으면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는 말도 환자나 보호자들에게서 들곤 한다. 내 주위 환자 중에는 허리에 쇠를 박는 수술 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말이다.

허리병의 근본적인 문제는 허리가 약해진 것이다. 허리를 구성하는 근육이나 뼈가 약해졌다는 얘기다. 근육이 약해지면 물리 치료, 스트레칭,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한다. 뼈가 약해지면 뼈를 강화시켜주는 약물과 주사를 맞아야 한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뼈와 근육, 인대, 디스크 등을 강하게 만들 수 없을 때 약물 및 신경 주사 치료를 하게 되고, 이러한 적극적인 치료로도 호전이 안 되면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허리 강화 운동으로는 맥킨지 운동을 추천한다.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 찾아보고 따라하면 좋겠다. 우리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운동 방법이 나와 있는 그림을 넣은 설명서를 제공한다. 그림을 보고 열심히 따라하니 허리가 좋아졌다는 환자를 만나면 뿌듯하다. 또 허리를 위한 최고의 운동은 수영이라 생각한다. 가능한 몸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운동을 하면

허리와 관절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요사가 코로나19로 수영하기가 어려운 게 흠이다. 또한 접영은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허리나 목이 아프면 수영 자세를 교정하든지 접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겠다.

코로나19 방역 기간에는 바른 자세로 걷는 운동을 추천한다. 허리 근육은 바른 자세로 서 있거나 걷는 운동이 된다.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것은 뼈가 안 좋은 것도 원인이 되지만 대부분은 허리 근육, 즉 기립근이 안 좋아서 기립이 안 되고 허리가 굽어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허리 수술은 쇠를 박지 않고 진행된다.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만 제거하거나, 아니면 두꺼워진 인대 및 뼈를 깎아서 신경이 지나가는데 길을 넓혀주는 수술은 쇠를 박지 않고 증상 회복이 가능하다. 허리에 쇠를 박는다는 말은 척추 유합술(融合術)을 의미하는데, 뼈가 흔들려서 불안정할 때 안정성을 주기 위해선 이 유합술이 필요하다. 또한 뼈와 뼈 사이로 허리 신경이 지나가는데 두 뼈 사이가 너무 좁아서 벌려 주어야 할 때, 수술 시에 나사못으로 뼈 사이를 벌리고

다시 안 좁아지게 유합을 시킨다.

척추 전문 의사들은 쇠를 박는다는 말보다 고정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허리뼈를 쇠로 고정할 때 골다공증이 있으면 고정되어있는 쇠가 느슨해질 수가 있다. 사고에 못을 박은 것과 콘크리트 벽에 못을 박는 것은 다르다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쇠가 허리뼈에 잘 고정되도록 매일 맞는 주사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주사제를 사용한다. 이 주사를 3-6개월 정도 맞으면 쇠가 뼈에 비교적 잘 고정된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한 노인에게도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게 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모든 수술이 전신 마취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필자의 경우에선 대부분의 수술을 부분 마취로 할 수 있었다. 허리에 쇠를 박는 수술도 마찬가지이다.

수술에 대한 많은 경험과 기술의 발달로 현재는 척추 수술의 성공 확률이 85-95%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 내 몸에 맞는 약물, 주사, 수술 치료로 건강한 허리, 든든한 허리를 가꾸어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건강하게 극복하고 행복해 지기를 바란다.

社說

농어촌 의료 공백...공공 의대 설립 절실하다

의사들의 수도권·대도시 쏠림 현상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이후 늘어난 '활동 의사' 수는 7915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74.8%는 수도권과 부산·대구로 몰렸다. 이 때문에 의사가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 업무를 보는 경우도 많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국회의원이 최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은 전국에서 1880명(2019년 기준)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남은 328명(17.4%), 경북 299명(15.9%), 전북 238명(12.7%), 충남 236명(12.6%) 등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보건 진료 공무원이 의사 업무를 맡고 있는 셈이다.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은 의사가 없는 의료 취약 지역에서 '간호사 및 조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정 시간 이상의 교

육을 수료한 뒤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들의 의료 행위가 가능한 것은 1980년 만들어진 농어촌의료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결국 40년 전에 도입된 제도가 아직도 농어촌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건 진료 전담공무원이 328명으로 가장 많은 전남의 의사 수는 고작 86명만 늘어나 전체 증가 의사 수의 1.1%에 불과했다. 의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이들 대부분이 수도권 등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사실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최근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보편적 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형 의대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 현실을 감안, 공공 의대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늘려 교통사고 줄여야

전남 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23.3%)이 전국에서 가장 높는데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지키기 위한 보호구역 지정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사고의 경우 노인 사망자가 어린이보다 30배 이상 높은 현실에서 지자체의 안전한 행정 탓에 노인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최영만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현황'에 따르면 전남 도내 노인복지시설 수 대비 노인보호구역 지정 비율은 11.2%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남 지역 노인 의료복지시설·복지관·생활체육시설·주거복지시설은 모두 436곳(지난해 기준)이지만 불과 49곳만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반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1024곳에 달했다.

지역별 노인보호구역 지정률은 충남이 116.3%로 가장 높았고 광주는 40.6%를 기록했다. 전남과 마찬가지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경북·전북·강원은 각각

31.2%, 12.9%, 11.5%였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시설 기관장이 시도지사 등에게 신청할 수 있고, 안전상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변 도로의 통행 속도가 제한되고 주차장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지정이 미흡한 것은 노인 보호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어린이보다 교통사고에 훨씬 취약하다는 점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공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길을 건너다 당한 사고는 노인이 어린이보다 3.2배, 사망자는 무려 37배나 많았다. 그런데도 전남의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 장비(CCTV)는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들은 지금까지도 노인보호구역을 늘리고 교통 단속 장비 설치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짧은 휴가를 보내며 여행지에서 수제 '햄버그 스테이크' 도시락을 구입했다. 계란 프라이와 반찬, 국과 소스, 후식으로 약과까지 담긴 도시락의 가격은 5900원. 푸짐한 구성이 미안할 정도로 저렴한 가격이었다. 도시락을 열었을 때 초록색 메모지에 적힌 손 편지가 눈에 들어왔다. "힘든 시기에 저의 가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 하세요" 편지 꼬트머리에 그려진 '하트' 모양을 보니 빙그레 미소가 지어졌다.

늦은 시간 가게에 들어섰을 때 목청 좋게 인사하던 젊은 주인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손님들에게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규제 심사 중이다. 즉 수취 이자를 현행 24%에서 법정이자율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 대대출 및 무이자 대출계약을 무효화하며, 무등록 영업 및 최고금리 위반 시 벌금형을 기존 최고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연말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유관 기관의 단속과 법 개정 등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라도 불법 사금융은 절대 가까이하지 않는 것만이 최선책이다. 이미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피해 구제 절차를 밟고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사금융 및 재할차금이 필요하다면 전통시장 상인·영세 자영업자·저신용자·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소액 대출 지원 사업, 햇살론17 등의 사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각에 노트와 펜을 건넸다. 노트를 받아든 승객들은 조심스레 자신의 마음을 써 내리기 시작했다.

아픈 몸으로 병간호를 해 준 암마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아씨의 생일을 축하하는 꼬마의 편지도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차곡차곡 쌓여졌고, 이러한 삶의 풍경들은 또다시 이에게 위로가 되기도 했다. 노트 제목 '길 위에서 쓰는 편지'는 우연히 저자의 택시를 탄 박춘 사인이 지어 준 것이다.

코로나로 만남이 줄어들어 사람의 온기가 그리운 요즘이다. 올해 명절에는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손 편지를 보내 이일이 많았다고 한 다. 만나지 못하는 애뜻함을 편지에 담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이메일이 보편화된 이후 손 편지를 보낸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올해는 한 자 한 자 눌러 쓴 손 편지를 누군가에게 보내 보는 건 어떨까. 굳이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메모 같은 간단한 글도 좋고, 작은 선물에 동봉한 한 줄의 글귀여도 좋다. 당신의 마음이 담긴 손 글씨가 전하는 위로와 따뜻함은 당신이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이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손 편지

기 고

불법 사금융 피해 아는 만큼 막을 수 있다



고현곤 농협 전남지역본부 상호금융업무지원단 차장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먼저 '내구제대출'이라는 것이 있다. '휴대폰 개통 시에 즉시 100만 원 지급'이라는 명함형 광고 형태로 '최신 휴대폰을 개통해 유심집과 함께 가져오면 현금을 주겠다'고 유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실행하면 연 50%에 가까운 고금리 대출과 동일하게 24개월간 월 8만 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토록 한다. 동시에 국제전화 요금도 매월 50만 원 이상 청구받게 하고 제공한 휴대폰은 범죄에 이용되기까지 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대출을 가장한 불법 대부 폭력이다.

다음으로 '상품권강'이 있다. 이는 '휴대폰 소액 결제로 모바일 상품권 20만 원을 구입해서 온라인상으로 상품권 코드를

보내주면 즉시 현금 17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유인한다. 결국 상품권 구입액보다 훨씬 적은 현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연 수백%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부담하는 대출과 동일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대리입금'이라는 유형도 있다. 아이돌 콘서트를 가고 싶은데 당장 현금이 없어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티켓 대금 10만 원을 입금해 줄 테니 3일 뒤에 수고비 1만 원과 함께 상환해 달라'라고 유인한다. 여기에 걸려들면 며칠 만에 연 이자율 수백%에 해당하는 초고금리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대리입금의 경우 부모님의 신분증과 연락처 및 휴대전화 번호를 악용한다.

또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공적지원 사칭' 유형도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19 자영업자 특별지원 대출은 서민금융원'에서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유인한다. 서민들이 공공기관의 공적 지원으로 착각해 신청토록 한 후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이 연 수백%의 고금리 일수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18년 기준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

는 7조1000억 원, 41만 명에 이른다. 특히 취약 계층인 노령층의 피해율은 2017년 27%에서 2018년 41%로, 주부는 13%에서 23%로 증가했다. 불법 채권 추심 또한 등록 대부업체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빚을 더 내게 하거나 제3자를 통한 채무 변제를 강요하는 등 악질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월 이후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일평균 20건씩 접수되던 피해 신고 및 제보가 올해 5월에는 60% 넘게 증가해 일평균 31건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이 논의됐다. 관계 부처는 6월부터 연말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 단속·차별,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의 전 단계에 걸친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법률구조공단 등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상담을 제공하고 채무자 대리인과 소송 변호사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금융원에 설치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는 1년 전보다 58% 많은 1235건의 피해 상담을 실시했다.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소를 전통시장, 상점가, 산업단지 등에서 12차례 이상 운영했으며 접수된 피해 건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 법률 상담(453건)을 거쳐 채무자 대리인이나 소송 변호사 무료 선임 등 법률 구제(95건)도 진행 중이다.

불법 사금융 업자의 불법 이득 제한과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규제 심사 중이다. 즉 수취 이자를 현행 24%에서 법정이자율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 대대출 및 무이자 대출계약을 무효화하며, 무등록 영업 및 최고금리 위반 시 벌금형을 기존 최고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연말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유관 기관의 단속과 법 개정 등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라도 불법 사금융은 절대 가까이하지 않는 것만이 최선책이다. 이미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피해 구제 절차를 밟고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사금융 및 재할차금이 필요하다면 전통시장 상인·영세 자영업자·저신용자·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소액 대출 지원 사업, 햇살론17 등의 사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